경찰, 수사권은 가져왔는데…수사할 형사가 없네

수사 부서 탈출 계속 늘어…광주 수사 보직 경찰 지난해보다 64명 줄어
힘들고 민원 늘어 기피…광주 형사법 시험 응시자 86명으로 절반 감소
베테랑들도 두손 들어…지방청으로 사건 몰리며 인력 한계 속 수사 지연

"수사부서에 배정받은 경찰관들, 도망가기 바빠요. 사건도 많아 민원도 늘어났고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살펴야할 게 더 많아졌는데…. ", "할 일만 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아 있겠어요? 요즘같은 시대에."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손에 쥐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해도 모자랄 시기에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지원하기는 커녕, 수사부서 탈출을 결심한 경찰관들만 늘어나는 모양새다.

일선 경찰서에 수사 인력·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들의 경우 지방청 반부패수사대가 도맡다시피하는 게 현실이다.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수사가 피해자들 바람과 달리,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가 하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수사' 경찰 안할래요"=2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은 지난해 1102명에서 올해 1038명으로 64명 줄었다.

수사경과자란 형사법 시험을 통과해 형사·지능 등 수사 관련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수사경찰을 의미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3492명에서 올해 3648명으로 경찰 수는 4.3%(156명) 증가했는데, 정작 수사경찰은 줄어든 것이다.

광주 뿐 아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3만 3769명이었던 수사경과 경찰관은 올해 3만 3615명으로 감소했다.

광주 일선 경찰서 한 수사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로 가던 고소·고발 사건들도 전부 일선 경찰서로 배당되는 상황이라 처리할 사건은 쌓이고 복잡한 사건들도 많아지면서 업무 강도도 세졌지만 인센티브는 없고 주말에 편히 쉴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이권이 얽힌 사건들은 관련자들의 민원도 늘어 제대로 해도 욕 먹는다며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경찰서에서는 "수사 전문 경찰이 되겠다며 들어온 젊은 경찰은 물론 베테랑 경찰들도 두손 들고 탈출하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수사경과를 포기한 경찰은 1534명. 지난해(794명)보다 2배 가깝게 늘었다. 비(非)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수사경과 해제를 신청하도록 한 게 원인이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설명대로라면 기껏 형사법 시험을 보고 수사경찰이 됐다가 더이상 안할테니 포기하겠다는 경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형사법 시험 자체도 안보려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올해 형사법 시험에 지원한 경찰관은 86명에 그쳤다. 지난해 147명에 견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9257명이 응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8248명만 형사법 시험을 지원했다.

수사경찰로 지원하지도 않고 수사부서에 근무하던 경찰마저 탈출하는 '엑소더스' 상황이다보니 광주경찰청 내 경찰서 수사부서 중 '경감'급 간부 경찰관이 맡아야할 팀장이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광주경찰청과 산하 4개 경찰서 중 경위가 팀장을 맡는 수사팀도 11개나 된다. 반면, 경감급이 맡는 파출소 팀장을 경위가 하는 곳은 전무하다.

◇"여력 안돼요", 웬만한 수사는 지방청만?=수사 전문가들인 수사경찰이 부족하다보니 광주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은 지방청이 도맡다시피하고 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얽힌 게 많은 사건들인데다, 인력도 한계를 보이면서 수사가 늘어지기 일쑤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북구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비위의혹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벌써 1년째 진행중이다.

반부패수사대는 여기에다 청연한방병원, 대리수술 의혹,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도 모두 맡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부동산투기 사건, 기성용 부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양향자 의원 전직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도 반부패수사대가 진행했거나 수사중이다.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한 재개발사업지 지분쪼개기도 맡았다. 비슷한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지 '지분쪼개기' 사건은 관할지역인 광주동부경찰이 아닌,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일선 경찰의 수사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청으로만 사건이 몰리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경찰청은 이같은 점을 인식, 신규 경찰관을 육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예비 수사 경과를 부여하는 방안, 수서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수사 경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경찰은 "수사하려는 경찰관이 없다보니 아예 처음부터 수사경찰을 육성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선 현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면 예배 금지 반발 교회 행정소송 각하

광주 안디옥교회 제기

광주지역 교회가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2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광화문 집회, 교회,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해져 내린 조치로,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했다.

해당 교회 목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경찰 비접촉 가능한 신형 음주단속기 투입

광주경찰이 2일부터 음주 단속 현장에 신형 음주 단속기〈사진〉를 투입한다. 차량 내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 흡입 모터'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다.

광주경찰청은 2일부터 광주 전 지역 음주 단속에 '신형 음주 운전 단속 감지기' 를 투입,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음주단속은 운전자 입 앞에 대고 길게 부는 접촉식 감지기 대신, 긴 봉에 달린 비접촉식 감지기를 차량에 밀어넣고 알코올 농도를 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미리 창문을 열고 속도를 줄이며 환기를 하는 꼼수(?) 운전자들로 단속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형 단속기는 이같은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신형 감지기는 차안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0.5초 만에 모터가 작동해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2초 만에 차 내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알코올 감지 센서도 전기화학식으로 바뀌어 알코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부터 광주지역 현장에 35대를 투입해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청사 난입 흉기 난동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검찰청사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검찰공무원 B씨에게 1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광주고검을 찾아와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반복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반영해 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검찰로 넘겼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성 평등 일상속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양성평등 주간(9월 1~7일)을 맞아 2일 오후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북구지역 여성지도자, 여성친화시민참여단원들이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제야 전두환 대면 조사?…5·18조사위 '뒷북' 논란

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인물 5명에 조사 공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전두환씨에게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시작 1년 뒤부터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1년 9개월만에야 대면 조사를 시작하는데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에 5분 전 바둑 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는 증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면 조사라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일 전씨를 비롯, 신군부 중요인물 5명에게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전씨 외에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다.

5·18조사위가 보낸 공지는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이른바 '내용증명' 형태의 서한문이다.

최근까지 관련 문헌 75만 건과 장·사병 등 80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5·18 당시 지휘 및 발포명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명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조사위 판단이다.

조사위는 대상자들의 조사 불응에 대비,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고발·검찰 수사 요청→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위의 대면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서 뒷북, 생색내기성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할때는 엄두도 내지 않다가 기억조차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려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애초 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도 적지 않다.

조사위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기본계획'을 통해 '조사 1년 뒤부터 피해자·목격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매월 1회 이상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기간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도 조사 시작한 이후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않았다. 여태껏 눈치를 보며 미뤘다가 건강 문제가 제기되니 뒤늦게 부산떤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은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3336	1	나주시 송월18길17 104동 16층 1602호[송월동,나주힐데스하임아파트] 70.2982㎡	아파트	184,000,000 184,000,000	관리비700,000원 미납[2020.4.9기준]
2020타경 76235	1	남구 봉선중앙로46 109동 13층 1303호 131.04㎡	아파트	630,000,000 63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66853	1	서구 화정동 764-44 158.6㎡	대	127,501,935 127,501,935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서구 화운로100번길 15-10 1층72.93㎡ 2층 44.88㎡ 부속 변소1.65㎡ 제시외 창고 등 18.9㎡	단독주택		
		서구 화정동 764-93 25.5㎡[물건번호1:공유자정정운1/2지분전부]	대		
[자동차,중기]					
2021타경 66990	1	사용본거지:광산구 신창로36번안길 13 205호 등록번호:46우9341 차명:아반떼 연식:2014	자동차	8,500,000 8,500,000	보관:광산구풍영정길65-15[주]대명씨앤피[062-952-2252,010-4601-5479]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9. 17.[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9. 24.[금]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